

정부 긴축 기조에 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 초비상

광주시

내년 국비예산 반영 전년비 971억 줄어 AI데이터처리 등 미래산업 대거 미반영 국회 예산심의 과정 반영·증액 총력전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 미래 사업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민선 시대 들어 광주시 국비 확보액 감소 사례는 2010년 딱 한 차례 뿐이며, 이마저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3조142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3년 연속 3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안 반영액(3조2397억원)보다는 971억원(3.0%)이나 줄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는 등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선 시대 들어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것은 최종 반영분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을 수립했던 2010년 3.6% 줄어든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고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 계속 사업비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광주시가 올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게 2024년

도 국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집중 권유했던 7개 사업 중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5억원)을 제외하고, 미래차 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등 나머지 6개 사업이 미반영된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간부가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간 공백을 잇는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처리 실증 환경 조성' 사업마저 국비 반영 사업에서 제외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조성, 광주역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김제~광주와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도 건설,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미디어아트관 건립, AI 영재교 설립 등 주요 신규사업 대부분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호남권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31억원), 남부권 관광개발(27억6천만원), 비행안전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2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AI 집적단지 조성(374억원),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67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148억원), 첨단 융합 콘텐츠 제작 유통지원(13억원), 상무소각장 문화 재생(126억6000만원),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 센터 건립(17억원),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58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00억원) 등이 계속 사업 예산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이 내년도 확정 예산이 아닌 만큼 올 연말까지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김광진 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혹은 조금 적게 담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8조6000억 확보 첨단 연구개발·전략산업·에너지 등 포함 오염수 방류 수산업 활성화 예산 반영 안돼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방항에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8조 2030억)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3년 연속 8조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통한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 및 전략산업, 에너지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국비 8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 전남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8조 6525억원)보다는 525억원 줄어 0.6% 감소했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 3878억원(4.9%) 늘었다.

분야별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10억원·총사업비 2023억), 우주발사체산업 기술사업화센터 설계비(15억원·총사업비 385억), 팽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 연구비(14억원·총사업비 365억),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연구비(10억원·총사업비 300억) 등 우주·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유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4억원·총사업비

450억),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기술개발(40억원·총사업비 300억),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17억·총사업비 200억),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 지원(40억원·총사업비 332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예산도 확보해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림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첨단 농업용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총사업비 1조 3105억), K 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비지원비(15억원·총사업비 450억),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설계비(4억원·총사업비 150억), 스마트 축산 수출전문단지 조성 설계비(4억원·총사업비 200억),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계비(21억·총사업비 594억) 등도 추진된다.

전남을 세계적인 찾는 남해안권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7억원·총사업비 320억), 진도 세방나초 아트문화 관광명소(3억원·총사업비 143억),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토지매입(90억원·총사업비 450억),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설계비(5억원·총사업비 400억) 등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SOC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8159억원)보다 5.1% 늘어난 8579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2420억원(총사업비 2조 6921억)을 확보, 오는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의했던 8개 사업(402억)은 전액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의 증액 노력이 절실하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0억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힘 "민생 우선 3대 개혁으로 내년 총선 국회 교체 토대 마련해야"

의원 연찬회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29일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 정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연구·노동·교육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둘째 날 이러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3대 개혁 추진,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들겠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미일 해군, 제주 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한미일 해군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달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2·4월 및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울곡 이이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합정의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대 가동을 위한 공유체계 점검도 병행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연합뉴스

행안위 조정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 돌입...국힘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전조정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특별법 제정은 물론 안전조정위 구성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전조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위원들 의견과 정부 측 견해를 정취한 뒤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며 "유족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성실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야당 의원 4명(민주당 송재호·이해석·오영환, 기본소득당 용혜인)만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